

아직도 전두환 흔적이...5共 때 인권침해 법령 그대로

5·18 이후 개정돼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폭력적 법령들 보니

시위 진압·강제 징집 용이하게
계엄법·병역법·보안법 등 개정
처벌 강화 등 사회통제 수단 활용

조병주 연구원 ‘5·18과 계엄’ 분석
계엄 선포 사전·사후 제약요건 강화
포고령도 법적 견제장치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씨의 신군부 세력이 만든 국가폭력·인권침해적 법령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30일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학술심포지엄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제적 진실-5·18과 계엄’에서 조병주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법령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5·18항쟁이 제5공화국의 사회통제법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1980~1981년 제·개정된 법률들을 분석,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은 1980년 공포된 국가보안법, 병역법, 군인사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을 비롯해 1981년 계엄법, 군형법, 군법회의법, 총검·도검·화약류단속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 발의와 제·개정에 영향을 줬다는 게 조 연구원 지적이다. 신군부가 기존보다 시위 진압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마구잡이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1981년 개정된 계엄법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범위를 기존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로 확대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권한도 5·18 전에는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전국 계엄령이 아니라

도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계엄 시 군법회의에 넘길 수 있는 죄목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추가한 점도 5·18을 계기로 반영됐다는 게 조 연구원 분석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부터 목적수행, 찬양·고무 등 규제 범위가 넓다. 사실상 계엄당국이 ‘국가의 안보와 체제의 위법이 된다’고 판단하는 대상자 모두를 군법회의로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1980년 개정된 집시법에 따른 시위 규제 장소도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로 기타 옥외장소’로 확대해 옥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소에서 열리는 시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군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개정해 무장공비 등 소탕 임무를 갖고 창설됐던 예비군의 임무에 ‘무장 소요 진압’을 추가하고 무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개정해 시위 진압 등 치안 업무의 일부를 전투경찰 순경에게 보조하도록 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소요사태를 진압함에 있어 소요행위자가 투항명령, 해산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항거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1980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일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소요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기존 징역 2년에서 10년으로 5배 늘렸다.

조 연구원은 “국가폭력을 배태하고 있는 법령들을 해체, 재조직화 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승인, 해제권과 같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사후적 제약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며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법적, 법률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기타 법령도 개정 이후 시행사례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5·18 피해자 차명숙씨 허위사실 담긴 도서 5·18문학상 수상작 선정에 기념재단 사과

5·18 기념재단이 5·18 피해자이자 유공자인 차명숙(65) 씨의 허위 사실이 담긴 도서를 5·18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사과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30일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려 “피해 사실을 왜곡한 도서를 수상작으로 선정, 시상했고 차씨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한 시집의 수록된 작품 해설에는 차씨의 피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평론이 담겼다”며 “문제가 있었으나 차 씨의 문제 제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학상 수상작 선정 시 문제가 없는지 교차 검증하겠다”며 “5·18 기념사업 본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씨는 오월 항쟁 당시 거리에서 가두방송을 한 시민으로,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5·18 유공자다.

지난해 11월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사료집을 누리집에 게재한 전년대 5·18 연구소로부터 사과받기도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년이 온다’ 기획전 둘러봐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30일 오전 광주 수피아여중생들이 금남로 5·18 기록관을 찾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관을 찾아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SKT 유심 대란에...애플은 고령층 한숨 깊어진다

출서는 오픈런 힘들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어려워 발 동동

SK텔레콤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으로 애플은 고령층 디지털 취약 계층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혹시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복제폰’이 생겨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지만, 고령층 이용자들은 SK텔레콤 측에서 안내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 가며 ‘오픈런’을 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유심집 물량조차 부족해 집 무로 교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층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영희(여·64)씨는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유심보호서비스부터 가입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혼란을 겪었다.

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를 받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혹시나 SK텔레콤을 사칭한 피싱 문자가 아닐까 의심돼 이도저도 못 했다는 것이다.

우씨는 “SK텔레콤으로부터 문자를 받긴 했는데, 내가 해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결국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겨 주고 서비스 가입을 부탁했다”며 “안 그래도 휴대전화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통장을 털릴까봐 걱정된다. 해외에서 전화가 자주 오고 스캠 문자도 수독하게 오는 데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알고 서비스를 가입하라는 것이냐”고 한숨을 쉬었다.

우씨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이 유심보호서비스 지원이나 안내 등을 온라인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서비스 가입 방법을 모르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대리점을 찾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화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7일 ‘유심 무상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로 내용을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심 무상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고, 게시물 내 링크를 클릭할 시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식이다. 정부와 경찰

등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피싱,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부산의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계좌에서 5000만원이 출금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초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수사 결과 피싱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스미싱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홍렬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매년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질 때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 교환’ 등 문자를 보내 스미싱 공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잘 모르는 사이트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피싱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출처가 의심스러운 문자 내 링크 등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간부급 뇌물수수 의혹’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급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30일 범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 남구 소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북부지검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급 직원 A씨가 관련 사업을 벌임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